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7, pp.199-235  
<https://doi.org/10.29212/mh.2025..137.19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과 광복군의 자주권을 둘러싼 김구-장제스 회담 연구

양지선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관

- 목 차**
1. 머리말
  2. 해방 전 김구-장제스 회담
    - 가. 제1차 회담(1933년 초): 임시정부 지원의 계기
    - 나. 제2차 회담(1943년 7월): 국제공동관리 논란과 카이로선언의 분수령
    - 다. 제3차 회담(1944년 9월): 임시정부 조직 점검과 후속 지원 논의
  3. 해방 후 김구-장제스 회담
    - 가. 제4차 회담(1945년 9월): 반복적 접촉을 통한 관계 관리
    - 나. 제5차 회담(1945년 10월): 국제공동관리 논란 속의 원칙적 지지
    - 다. 제6차 회담(1945년 11월): 송별과 전후 질서 구상 속의 한국 문제
  4. 맺음말

**초 록** 본 연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중국 국민정부 주석 장제스의 여섯 차례 회담(1933~1945)을 중심으로,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과 광복군 자주권 확보 과정의 의미를 규명한다. 두 인물의 회담은 해외에서 수립되고 활동했다는 특수한 조건과 중일전쟁·태평양전쟁이라는 전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상의 정상 외교로, 임시정부 승인과 광복

군 지위 정리, 한국 문제 등 독립운동의 전략을 결정한 중대한 외교 행위였다.

본 논문은 해방을 기준으로 여섯 차례의 회담을 전기(1933~1944)와 후기(1945.9~11)로 나누어 분석했다. 전기 회담은 임시정부의 정통성 확보와 광복군 독립 지위 획득을 위한 외교 교섭의 시기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독립 문제를 국제정치의 의제로 부상시켰다. 후기 회담은 해방 이후 임시정부의 한국과 광복군 정비, 주화대표단 설치 등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실무 협의였다.

김구는 승인 교섭의 지연 속에서도 광복군의 자주권 강화로 임시정부의 실체를 입증하고자 했고, 장제스는 형식적 승인은 유보했으나 광복군의 임정 직속 편입과 재정·시설 지원을 통해 사실상 승인을 표했다.

결국 김구 - 장제스 회담은 해방 전후를 아우르며 임시정부의 외교적 정통성과 광복군의 자주적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이자 독립운동의 외교적 성과를 구체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Key Word) : 김구, 장제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카이로선언

원고투고일 : 2025. 10. 12. 심사수정일 : 2025. 12. 01. 게재확정일 : 2025. 12. 15.

## 1. 머리말

1919년 4월 11일 상하이(上海)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김구(金九)는 1945년 11월 5일 귀국길에 오르기까지 26년 동안 중국 국민정부(國民政府)의 최고 지도자 장제스(蔣介石)와 모두 여섯 차례의 회담을 가졌다. 국외에서 수립되고 활동했다는 특수한 조건과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이라는 전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 회담은 형식상 비공식적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국 최고 지도자 간 정상회담에 준하는 외교 행위였다. 회담에서 다루어진 의제는 단순한 현안의 조정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의 승인 문제와 한국광복군(이하 광복군)의 자주권 확보 등 독립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김구-장제스 회담 자체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기보다 특정 시기나 개별 쟁점을 중심으로 하는 단편적 접근 경향을 보였다. 이를테면 중국 국민정부의 한국독립운동 지원, 임시정부의 승인 문제, 카이로회담(開羅會談)에서의 한국 독립 보장, 주화대표단(駐華代表團) 설치 등은 여러 연구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으나,<sup>1)</sup> 이들 논의 과정에서 장제스와의 회담

1) 김정인, 「임정 주화대표단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배경한,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와 蔣介石」, 『역사학보』224, 역사학회, 2014; 이재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공동관리안 반대운동(1942~1943)」, 『한국독립운동사연구』4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71, 2014; 經盛鴻·經姍姍, 「韓國志士金九等在南京的抗日復國活動」, 『日本侵華史研究』3, 2014; 조덕천, 「중일전쟁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지원」, 『동양학』6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6; 배경한, 「윤봉길의거 이후 蔣介石·국민정부의

은 단순한 배경적 사건으로만 언급될 뿐이었다. 그 결과 회담의 구체적 경위와 논의 내용, 그리고 그 성과가 임시정부의 정책 결정과 외교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김구와 장제스의 여섯 차례 회담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그 외교적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본 논문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점으로 회담을 전기(1938~1945.8)와 후기(1945.8~11)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전기 회담은 임시정부의 공식 승인과 광복군의 독립적 지위 확보, 즉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대외적 인정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반면 후기 회담은 해방 이후 임시정부의 귀국 문제와 통치 주체로서의 정당성 확보, 그리고 광복군의 자주권 유지 및 귀국 이후의 재편 방안이 중심 의제로 다루었다.

이를 위해 『蔣介石 日記』, 『白凡逸志』, 『大韓民國臨時政府文書輯覽』 등 국내외의 1차 사료를 비롯하여 임시정부 외교문서, 중국 정부와 주고받았던 공함, 당시 중국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교차 검토했다. 이러한 사료 분석을 통해 회담의 시기와 장소, 논의된 주요 의제와 발언 내용을 복원하고, 그 결과가 임시정부의 정책 결정 및 광복군의 운영 원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고찰하였다.

나아가 김구-장제스 회담을 단순한 한중 양자 관계의 사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시 동맹 체제 속에서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의 국제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임시정

한국독립운동지원과 ‘長期抗戰’, 『역사학보』, 역사학회, 2017; 崔鍾健 譯編, 『大韓民國臨時政府文書輯覽』, 知人社, 1976; 胡春惠著, 辛勝夏譯, 『中國인의 韓國獨立運動』, 단대출판부, 1978;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부의 외교 활동이 어떻게 자주적 독립 노선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 제약 속에서 중국 국민정부의 지원을 조율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김구-장제스 회담이 임시정부의 승인 문제와 광복군의 자주권 확립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해방 전후 한중관계의 변화 과정속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해방 전 김구-장제스 회담

### 가. 제1차 회담(1933년 초): 임시정부 지원의 계기

1932년 1월 28일 일본은 상하이를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해 4월 29일 홍커우공원(虹口公園)에서 일왕 생일과 전승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尹奉吉 義擧가 발생해 시라카와(白川 義則) 상하이파견군 사령관과 카와바타(河端貞次) 거류민단장이 사망하고, 시게미쓰(重光葵) 주중일본공사 등 일본 군정 요인들이 중상을 입었다. 일본 핵심 인사들을 타격한 이 사건은 한국독립운동사의 장거이자 동아시아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장제스는 윤봉길 의거와 관련해 그의 일기에 단순히 “왜구의 중요 관리들이 신공원에서 중상을 입었다”라고만 기록했다.<sup>2)</sup> 이는 범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과 당시 중일 간 정전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외교적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일본과의 장기항전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줄곧 정전협정을 추진해 왔다. 윤봉길 의거가 있던 4월 29일, 일본과의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윤봉길 의거 후 국민정부 외교부

2) 『蔣介石日記』, 1932년 4월 28일(29일의 오역으로 보인다).

측에서는 중일 간 정전협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과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의 침략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제스 역시 4월 초 이래 정전협상을 통한 상하이사변의 조속한 해결에 절박감을 나타내고 있었다.<sup>3)</sup> 실제로 일기에서는 정전협정 미체결을 자신의 실책으로 반성하기도 했다.<sup>4)</sup>

장제스의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드러난 바 있다. 그는 1927년 이미 “고려·타이완의 독립을 약소민족 해방의 출발”로 인식하는 등<sup>5)</sup>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제국주의의 확장으로 이해했으며,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약소민족의 독립을 돕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1931년 만주사변 후에는 그곳의 시정과 사람들의 애국정형 등을 듣고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괴로움을 토로하며 간부훈련반 제6대를 창설해 만주국의 독립과 환수에 효과적인 반일공작을 위한 정책 연구에 몰두하였다.<sup>6)</sup> 1932년에는 “10년 후인 1942년 추석을 기점으로 東北3省을 회복한 후 조선을 해방시키고, 타이완과 琉球(류큐)를 다시 회수할 것”을 다짐하면서<sup>7)</sup> 오랜 기간 동북에서 항일투쟁의 경험이 있던 한국혁명단체들과의 연대를 추진해 나갔다.

따라서 윤봉길 의거가 장제스의 한인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 결정적 계기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은 한국독립운동 세력을 항일 전략에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장제스는 “한인 청년을 제일전선의 투사로 활용하는 것이 반만투쟁에

3) 배경한, 「윤봉길의거 이후 蔣介石·국민정부의 한국독립운동지원과 ‘長期抗戰」, 『역사학보』, 역사학회, 2017, 390쪽.

4) 呂芳上編, 『蔣中正先生年譜長編(3)』, 國史館, 2013, 656쪽.

5) 『蔣介石日記』, 1927年 3月 11日.

6) 양지선, 「한국독립운동세력과 CCP의 역행사의 공동 첩보활동」, 『동양학』6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6, 128쪽.

7) 『蔣介石日記』, 1932年 9月 13日.

가장 효과적”이라는 보고를 받고,<sup>8)</sup> 黃埔軍官學校 출신 텅제(騰傑)와 황샤오메이(黃紹美)를 한국 방면 연락책임자로 임명했다.<sup>9)</sup> 특히 텅제가 金元鳳과 동문이라는 점은 연결 고리가 되었다. 김원봉은 장제스에게 〈中韓合作에 관한 건의〉를 전달하며 僞滿洲國 교란을 위한 한중 합작 항일투쟁을 제안했다.<sup>10)</sup> 이 과정에서 국민당 내부 연구조직인 力行社는 한인의 반만공작 참여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임시정부와 장제스의 연계도 구체화되었다. 국민당 조직부 주석 천귀푸(陳果夫)는 朴贊翊에게 직책을 마련해 주는 등 임시정부 지원에 직접 관여했으며,<sup>11)</sup> 샤오정(蕭錚)과 공패이청(貢沛誠)은 임시정부 인사들의 피신을 도운 뒤 장제스를 만나 상황을 보고했다. 특히 공패이청은 한국독립운동 세력의 위상과 임시정부의 중심성을 강조하면서<sup>12)</sup> 이들을 신속히 지원해 항일의 주력으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몽골에서 청년을 훈련하고 기마대를 조직하는 항일 활동과 병행해 한국독립운동 세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장제스에게 직접 건의했다.<sup>13)</sup>

이처럼 장제스는 한인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단순 독립운동가를 넘어 “국내 유력 세력의 상징적 지도자”라는 평가를 접한 뒤 회담을 결심했다. 김구-장제스의 첫 번째 회담은 이러한 맥락에서 성사되었다. 1932년 7월 하순, 샤오정은 國民黨駐獨員으로 지내던 오우양거(歐陽格)에게 회담 주선을 요청했다. 이때 김구는 “동북지역 한교를 기

8) 「義烈團及金九等ノ行動」, 『外務省警察史 支那ノ部』, 7748~7751쪽.

9) 『蔣介石日記』, 1932년 5월 31일.

10) 金正柱編, 『조선통치사료』10, 한국사료연구소, 1971, 705쪽.

11) 南坡 朴贊翊 傳記 刊行委員會, 『南坡 朴贊翊 傳記』, 乙酉文化社, 1989, 201쪽.

12) 『蔣介石日記』, 1932년 7월 2일; 7월 4일.

13) 「蔣中正電魯滌平趙觀濤嚴查清剿江山廣豐等地共匪, 貢沛誠向蔣中正報告韓國獨立黨情況與內蒙騎隊等並請派人協同工作等」, 1932년 7월 6일(臺灣黨史館 所藏).

반으로 기마별동대를 조직해 국내 진입을 시도하면 항일 역량이 증대될 것”이라 제안했다. 비록 김구가 제안한 한인기병학교 설립은 무산되었으나, 장제스는 김구와의 직접 회담을 수락했다.

1933년 1월 한커우(漢口)에서 돌아와 난징에 머물던 장제스는 천귀푸를 통해 김구에게 면담 통지서를 보냈고, 김구는 安恭根·嚴恒燮과 함께 난징으로 향해 박찬익의 통역으로 처음 장제스를 대면했다. 김구는 일본 본토·만주·한국에서의 특무공작 계획과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제스는 “특무공작은 일시적 타격에 불과하다”며 한인 무관 양성을 통한 장기적 기반 조성을 권유했다.<sup>14)</sup>

비록 단기적 특무공작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대신 河南省 뤼양(洛陽)분교 한인특별반 설치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회담 이후 국민정부 군관학교 뤼양분교에 한인특별반이 개설되었고, 주임은 주샤오저우(祝紹周), 군사위원장 겸 교장은 장제스가 맡았다. 1934년 2월 개교 당시 17세~35세 청년 92명이 입교해 포병·기관총 등 전문 훈련을 받았다.<sup>15)</sup>

1933년 김구와 장제스의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상호 교섭의 결과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정부의 전략적 구상 위에 이루어진 협력의 성격이 더 강했다. 김구가 제시한 단기적 특무공작을 거절하는 대신 장제스는 반만공작을 감안해 한국인 무관 양성을 통한 장기적 기반 조성을 제안하며 협력 방향을 주도해 나갔다. 따라서 1차회담 후의 협력은 대등한 연대 관계라기보다는 중국 측의 전략적 고려 속에서 도출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특별반의 설치는 단순한 한인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넘어 중국군사위원회의 편제 안에 한국독립운동 세력

14) 김구 저;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55~356쪽.

15)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一潮閣, 1993, 37쪽.

을 포함시키는 조치였으며, 이는 한국독립운동가들을 단기적 동맹이 아닌 장기적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한 제도적 성격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비록 일본의 압력으로 한인특별반이 1년여 만에 폐쇄되었으나, 그 졸업생들이 훗날 한국광복군(이하 '광복군' 약칭) 창설의 핵심 인력이 되었던 사실 역시 협력의 실질적 성과였다.

한편, 김구는 첫 회담 자리에서 군관학교 개설뿐 아니라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중국 국민정부는 이를 수용해 활동비를 비롯한 경비 지원을 제도화했다. 경비 수령을 위한 임시정부 전용 도장이 마련되었으며, 업무는 천귀푸가 책임을 지고 사오정이 실무를 담당했다.<sup>16)</sup> 이후 임시정부 요인들의 거처 마련과 피난, 안전 문제는 국민정부 차원에서 관리되었는데 CC단과 藍衣社 같은 국민당 비밀조직이 이를 전담했다. 특히 1935년 2월 조선 총독부 밀정 黃逸民 즉 吳大根과 陳鴻文이 김구 암살을 시도했을 때 남의사가 이들을 체포·처형한 사건은 국민정부가 임시정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했음을 잘 보여준다.<sup>17)</sup>

따라서 1933년 회담은 한국독립운동이 중국의 항일전략의 틀 안에 제도적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즉, 윤봉길 의거로 촉발된 한중연대가 제도화된 군사 협력과 정치적 지원 체계로 발전하는 분수령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김구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임시정부를 안정적으로 존속시켜 장기적으로 광복군 창설과 국제적 독립 보장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16) 「김구가 소쟁에게」, 1934년 10월 30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중국의 인식)』, 국사편찬위원회, 2008, 200쪽).

17) 「戴笠呈蔣中正處決暗殺韓國愛國志士之漢奸吳大根等」(臺灣黨史館 所藏).

## 나. 제2차 회담(1943년 7월): 국제공동관리 논란과 카이로선언의 분수령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충칭(重慶)을 배도로 삼아 전면 항전에 대비했다. 임시정부 역시 1932년 상하이를 떠난 이래 8년여의 이동기를 거쳐 1940년 충칭에 안착했다. 임시정부는 민족주의 계열 3당을 통합하여 충칭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강력한 지휘체계를 마련했다. 군사적으로도 임시정부는 일찍이 「大韓民國陸軍臨時軍制」를 제정해 대일 전면전에 대비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이를 ‘때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해 軍事委員會를 설치했으며, 1939년에는 軍事特派團을 시안(西安)에 파견해 군대 창설을 준비했다. 그 결과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을 정식으로 창설했다. 그러나 중국군사위원회가 「九個行動準繩」을 내세워 광복군을 예속·통제하려 했다. 참모장 등 중국 측 사령관이 광복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는 구조였기에 임시정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전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sup>18)</sup>

이처럼 중국의 승인과 지원 없이는 임시정부의 활동이 불가능했기에 일단 중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상 중국의 지원은 군사활동을 지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김구는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연합군과 함께 전장에 나서고자 했다. 이를 위해 주자화(朱家驊)를 통해 장제스와의 직접 회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일본군의 공습으로 회담이 무산되고 말았다.<sup>19)</sup>

1941년 9월 22일, 주자화는 김구에게 답신을 보내 장제스와의

18) 韓詩俊, 『한국광복군연구』, 120쪽.

19)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7, 대한매일신보사, 1999, 79~80쪽.

회담 문제를 포함해 그간의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힘쓰겠다고 답했지만,<sup>20)</sup> 실제 성사는 지연되었다. 김구는 1942년 2월 9일 다시 주자화에게 약절 1부를 채납하며 장제스에게 전달을 부탁하며 재차 회담 주선을 요청했다.<sup>21)</sup> 이 무렵을 전후하여 한국에 대한 國際共同管理(이하 국제공관) 방침이 알려졌다.

1942년 8월경 미국은 “일정 기간 후 독립시키되, 그 기간 중 연합국의 공동관리하에 자치능력을 배양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1943년 3월 말 영국도 이에 동의했다. 이 사실은 송즈윈(宋子文)을 통해 중국정부에 전달되었다.<sup>22)</sup> 임시정부는 이를 중대 사안으로 받아들여 외무부장 趙素昂과 선전부장 嚴恒燮이 나서 1943년 2월 1일과 6월 11일자 신문 기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sup>23)</sup> 이어 5월 7일에는 申翼熙를 중국 외교부에 파견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장제스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니 특별히 주의할 것”이라 지시하여 명확한 확인은 하지 못했다.<sup>24)</sup> 이에 임시정부는 5월 10일 自由韓人大會를 개최하고 국제공관 방침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

김구는 국제공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제스와 루즈벨트의 회담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 전에 장제스를 만나 직접 논의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6월 10일과 12일 다시 주자화에게 회담 요청서한을 보내 다시 한번 면담을 요청했다. 주자화는 성사 지연을 우려해 秘書長 우테청(吳鐵城)에게 직접 주선에 나섰다.<sup>25)</sup> 사실

20) 「蔣介石과의 신속한 면담을 약속하는 답신」, 1941년 9월 18일(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7, 327쪽).

21)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7, 96쪽.

22) 배경한, 「카이로회담과 한중관계」, 『한국민족운동사연구』85, 344~345쪽.

23) 「戰後韓國獨立問題: 不能贊同國際共管」; 嚴大衛, 「關於戰後韓國問題之一封公開信」, 『大公報(重慶)』, 1943년 2월 1일.

24) 「미·영과의 한국문제 협의에서 기존정책을 견지할 것을 지시」, 1944년 10월 27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118쪽).

25)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7, 385쪽.

장제스는 1943년 4월, 이미 韓國獨立黨 당수 김구와 朝鮮民族革命黨 영수 김원봉과의 정기회담을 결정한 상태였다.<sup>26)</sup> 다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中央執行委員會 秘書處는 장제스의 카이로회담 참석이 확정된 뒤인 7월 22일에야 7월 26일 오전 8시 군사위원회에서 회담 개최 사실을 김구에게 통보했다.<sup>27)</sup> 장제스가 김구와의 회담을 결정한 것은 무려 10년 만의 일이었다. 그사이 광복군 창설, 「九個行動準繩」, 임시정부 승인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었지만 회담은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김구가 장제스와의 회담을 계속해서 요구한 근간에는 광복군의 지휘권 문제가 있었다. 광복군은 창설 이후 줄곧 독자적 작전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활동 또한 중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김구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타개하고 자주권 확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직접 회담을 희망했던 것이다.

장제스가 김구와의 회담을 다시 결정한 배경 역시 당시 중국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었다. 1941년 日蘇中立條約 체결은 中蘇관계를 급격히 악화시켰고,<sup>28)</sup> 외몽골과 만주국의 독립 승인 조항은 중국 사회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어 소련이 中共을 공개적으로 지원하면서 장제스는 대내적으로 산시(陝西)·간수(甘肅)·닝샤(寧夏) 지역의 공산세력을 견제하고, 대외적으로는 만주의 일본군과 소련이라는 변수까지 상대해야 하는 곤경에 처했다.<sup>29)</sup> 이 때문에 그는 소련의 후발 참전이 중국의 희생을

26) 「장개석 위원장의 김구 · 김약산 회담 문제」(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72쪽).

27)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외무부)』, 국사편찬위원회, 2007, 132쪽.

28) 張西虎, 「論第二次世界大戰時期的中蘇關係」, 『社會科學家』, 陝西理工學院, 2005, 257쪽.

29) 官互進, 「蔣介石參加開羅會議內幕」, 『湖北檔案』, 湖北省檔案局, 2000, 40쪽.

가중시키고 전후 동아시아 정세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 우려하면서 美中 공동항일을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제스는 한국과 베트남 등 인접 약소민족이 독립하여 국민정부와 친화적인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반공질서 확립과 정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구와의 회담은 광복군의 자주권 문제를 둘러싼 한국 측의 요구와 국제정세 속에서 장제스가 모색한 전략적 계산이 교차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1943년 7월 26일 오전 9시, 충칭 중국군사위원회에서 제2차 김구-장제스 회담이 개최되었다.<sup>30)</sup> 한국 측에서는 김구를 비롯해 외무부장 조소앙, 선전부장 金奎植, 광복군 총사령 李靑天, 부사령 김원봉, 통역 安原生 등 6명이, 중국 측에서는 비서장 우테청이 배석했다.<sup>31)</sup> 주목할 점은 김구와 김원봉이 함께 회담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제스의 결정이었지만, 김구는 장차 영도권 분할을 우려해 공동회담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반면 김원봉은 발언 기회를 적극 활용하며 자신에 대한 원조 확대를 기대했다.<sup>32)</sup>

회담에서 김구와 조소앙은 “영·미가 전후 조선에 대해 국제공동관리를 구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이 이에 동조하지 말고 ‘완전한 독립’을 관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제스는 “中國革命의 최종 목적은 朝鮮·泰國의 독립을 돕는 데 있다”고 하면서도 “영·미가 실질적으로 신탁통치를 지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爭執이 많을 것이므로 한국 내부의 전선통일을 먼저 보여야

30) 陳永祥·何少偉·李文光, 「開羅會議戰後米國遠東戰略視野中的中國戰場」, 『廣州社會主義學院學報』, 廣州社會主義學院, 2016, 92쪽.

31) 「蔣總裁가 韓國의 指導者들을 接見하여 面談한 內容의 要點」, 1943년 7월 26일 (崔鍾健 譯編, 『大韓民國臨時政府文書輯覽』, 90~91쪽).

32) 「장개석의 한국 각 당파 영수 회담」, 1943년 5월 6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54쪽).

중국도 力爭할 수 있다”고 답했다.<sup>33)</sup> 즉, 그는 한국 독립의 당위성에는 공감했으나, 국제정세 속에서 즉각적인 승인 약속은 피하고 조건부 협력의 입장에만 머물렀던 것이다.<sup>34)</sup>

이번 회담을 통해 비록 독립 보장의 즉각적 성과를 얻지는 못했으나 중국 지도부가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적 협상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장제스는 카이로회담을 앞두고 이 문제를 철저히 준비했다. 먼저 회담 전 11월 11일 다이리(戴笠)로부터 미국·영국의 전후 정책을 보고받았으며,<sup>35)</sup> 18일에는 ①국제정치조직 ②원동위원회 ③중·영·미 연합참모단 ④점령지 관리 ⑤버마 반공 ⑥조선 독립 ⑦동북·타이완의 중국 귀속 등 7대 안건을 확정했다. 이어 22일 최종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23일 루즈벨트와의 회담에서 한국 독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지지를 요청했던 것이다.<sup>36)</sup>

그 결과 “三大盟國은 朝鮮人民이 받아들인 노예적 처우를 고려하여 적당한 시기에 朝鮮을 自由獨立케 한다”는 구절이 삽입된 「카이로선언」이 채택되었다. 이는 전후 한국 독립의 국제적 보장을 최초로 명문화한 것으로, 장제스가 김구와의 회담에서 한 약속을 일정 부분 국제무대에서 실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장제스의 단순한 ‘개인적 약속’의 차원을 넘어 한국 독립이 전후 동북아 질서 재편과 중국의 주권 문제 특히 만주와 타이완의 귀속 문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었다.

33)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대중국 외교활동)』, 국사편찬위원회, 2008, 238~239쪽;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5, 대한매일신보사, 1999, 251~253쪽.

34) 「蔣總裁가 韓國의 指導者들을 接見하여 面談한 內容의 要點」, 1943년 7월 26일 (崔鍾健 譯編, 『大韓民國臨時政府文書輯覽』, 90~91쪽).

35) 『蔣介石日記』, 1943년 11월 11일.

36) 『蔣介石日記』, 1943년 11월 23일.

따라서 제2차 김구-장제스 회담은 단순한 독립운동가와 중국 지도자의 만남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요구와 장제스의 전략적 계산이 조응한 계기였다고 하겠다. 이 만남을 통해 한국독립 문제가 국제협상의 의제로 비약할 수 있었으며, 결국 한국독립보장이라는 카이로선언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자극제가 되었다.

#### 다. 제3차 회담(1944년 9월): 임시정부 조직 점검과 후속 지원 논의

1943년 카이로선언으로 전후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으나, 중국 내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여전히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고, 광복군 역시 중국군사위원회 산하에서 '9개 행동준승'이라는 제약 속에 제한된 작전권만을 행사하고 있었다.

사실 임시정부는 1919년 수립 직후부터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1921년 광둥(廣東)의 護法政府에 申圭植을 파견해 정식 승인을 요청했으나, 독립안만 채택되어 사실상 승인에 그쳤다.<sup>37)</sup> 이후 1940년 7월 중경 정착 이후 김구는 중국 언론에 「中韓合作之我見」을 발표하며 임정 승인을 갈망한다고 천명했고,<sup>38)</sup> 1941년 10월에는 임시의정원이 직접 국민정부에 승인안을 제출했다. 국민당 내부에서도 임시정부 승인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었으나,<sup>39)</sup> 중국은 단독 승인을 주저했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불안정한 지위는 전쟁 말기 국제정세의 구조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국은 임시정부 승인을 검토하면

37) 吳京平, 「항전시기에 한국 임시정부의 승인에 대해 중국 국민 정부가 가졌던 태도에 관하여」, 『동방학지』124, 延世大學校東方學研究所, 2004, 61쪽.

38) 金九, 「中韓合作之我見」, 『(重慶)大公報』, 1940년 7월 7일.

39) 「국민참정회가 건의한 '자유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식승인안' 문제」, 1942년 2월 14일,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95쪽.

서도 미국의 입장을 먼저 조회했는데,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정책과<sup>40)</sup> 인도 문제를 의식해 한국문제를 동시 처리하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sup>41)</sup> 1942년 이후 미국의 대규모 차관에 의존하게 된 현실 또한 국민정부의 외교적 자율성을 크게 제한했다.<sup>42)</sup> 결국 미국의 협조 없이는 대일전 수행이 어려웠던 중국으로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도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독립도 함께 승인하려 하므로 지금 중국이 먼저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sup>43)</sup> 그 결과 카이로선언에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독립국으로 한다’는 문구가 명기되었음에도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유보되었다. 김구는 이를 단순한 외교적 지체가 아니라 독립운동의 실질적 기반이 부재한 구조적 한계로 인식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김구는 1944년 7월 3일 장제스에게 편지를 보내 임시정부 승인을 공식 요청하고, 임시정부 요인들과의 회담 기회를 달라고 청했다. 그는 카이로선언에 한국 독립 보장 문구가 삽입된 만큼 이제는 연합국과 함께 전선에 나설 준비가 되었으나, 임시정부 승인 문제와 광복군의 9개 행동준승 때문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sup>44)</sup>

회담은 비교적 빠르게 성사되었다. 두 번째 만남은 1944년 9월 5일, 장제스는 제3차 전중회의에서 치사를 마친 직후 관저로 돌아와 회담에 임했다.<sup>45)</sup> 회담에서 김구는 임시정부가 이미 25년 이

40) 김용신, 「장개석 국민정부의 미국 편승 전략과 한국의 독립 문제 1942-1945」, 『사회과학논집』제49집 1호, 울산대학교, 2018, 44쪽.

41) 吳京平, 「항전시기에 한국 임시정부의 승인에 대해 중국 국민 정부가 가졌던 태도에 관하여」, 『동방학지』124, 66쪽.

42) 張西虎, 「論第二次世界大戰時期的中蘇關係」, 『社會科學家』, 257~258쪽.

43)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문제에 대한 외교부와 국민당의 의견」, 1942년 4월 2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시기 문제」, 1943년 7월 5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100쪽, 106쪽).

44) 秋憲樹編, 『資料韓國獨立運動』1, 延世大學校出版部, 1971, 453~454쪽.

45) 『蔣介石日記』, 1944年 9月 5日.

상 한국 독립운동을 주도해온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강조하면서 임시정부의 정식 승인과 광복군의 독립적 지휘권 회복, 그리고 환국 이후를 대비한 재정·조직 지원을 공식 요구했다.<sup>46)</sup> 김구가 직접 준비한 비망록에는 ①임시정부 승인, ②광복군 지휘·훈련 협정 체결, ③독립운동 재정 지원, ④재외 교민과의 연락망 확보, ⑤차관 제공, ⑥생활비 지원 등 여섯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sup>47)</sup> 이처럼 비망록의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요청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실질적 활동 기반을 동시에 보장받기 위한 종합 전략이었다. 김구는 광복군의 독자적 작전권 회복을 통해 연합군의 작전에 정식 참여함으로써 전후 독립의 주체로 인정받으려는 구상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장제스는 김구의 요청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미국·영국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정부를 먼저 승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승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임시정부는 법적 주체가 아닌 사실상의 정치 단체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대신 실질적 지원을 약속하며 우테칭에게 관련 실무를 위임하였다.<sup>48)</sup>

김구가 비망록에서 두 번째로 제기한 사안은 광복군 지휘권 회복과 훈련 정비, 즉 '9개 행동준승' 철폐 문제였다. 임시정부는 이미 1942년 '인통접수' 형식으로 이를 수용했다. 그리고 철폐를 위해 1943년 국무회의에서 공식 논의를 가진 후 김원봉을 중심으로 중국 측과 활발히 교섭을 전개했다. 카이로선언 이후에는 철폐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지기도 했다.<sup>49)</sup>

46) 崔鍾健 譯編, 『大韓民國臨時政府文書輯覽』, 81쪽.

47)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5, 565~569쪽.

48)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문제와 관련한 국방최고위원회의 보고와 장개석의 의견」, 1944년 11월 15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123~127쪽).

49) 김광재, 『한국독립운동의역사(한국광복군)』5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85~92쪽.

그러나 카이로선언 이후에도 광복군이 중국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 독자적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주요 지휘관 자리까지 중국 측이 장악하면서 광복군의 작전권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이는 곧 임시정부의 실질적 위상과 국제적 인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sup>50)</sup> 따라서 광복군 지휘권을 회복해 임시정부 직속으로 편입시키는 일은 단순한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연합군과의 직접 협작을 통해 전후 승전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필수조건이었다.<sup>51)</sup> 김구가 임시정부 승인 요구와 나란히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1944년 8월 23일, 중국군사위원회는 ‘광복군 9개행동준승을 폐지하고 광복군을 임시정부에 직속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김구에게 통보했다.<sup>52)</sup> 이어 허잉친(何應欽)이 8월 28일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전시 상황에서는 중국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김구는 장제스로부터 “광복군은 임시정부에 예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확인을 얻어 실질적인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sup>53)</sup>

나아가 김구는 광복군의 정비와 전선 투입을 위한 재정·훈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제3차 회담의 논의를 구체화해나갔다. 그는 광복군을 정식 부대로 편성하고 훈련반을 개설해 연합군과의 합동작전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sup>54)</sup> 이를 통해 전후 독

50) 「한국에 대한 비밀첩보침투를 위한 독수리 작전 보고서」, 1945년 3월 1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한국광복군Ⅲ)』, 국사편찬위원회, 2006, 122쪽.

51) 「한국독립운동과 관련한 서신」, 1943년 11월 15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한국광복군Ⅲ)』, 51쪽; 57쪽).

52) 「光復軍九個行動準繩 폐지에 관한 건」, 1944년 8월 28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163쪽).

53) 「韓國光復軍改隸臨時政府 戰時受我軍委會指揮」, 『中央日報』, 1944년 8월 29일.

54) 「韓國 臨時政府의 承認과 協助를 要請하는 備忘錄 및 要求條件」, 1944년 9월 5일(崔鍾健 譯編, 『大韓民國臨時政府文書輯覽』, 82~83쪽).

립국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장제스는 이러한 제안을 수용해 재정 보조 확대와 실무 협조를 지시했다.<sup>55)</sup> 김구는 다시 임시정부에 대한 경상비 및 생활비 지원 등도 추가로 요청했다.<sup>56)</sup> 그러나 충칭의 급격한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폭락으로 실제 지원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sup>57)</sup> 국민정부는 9월부터 정기 보조비를 백만 달러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김구가 “중국의 도덕적·정신적 협력은 감사하지만 특수공작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의 원조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던 것처럼 현실적 한계는 분명했다.<sup>58)</sup>

이어 임시정부의 활동 기반을 제도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요구도 제시했다. 김구는 중국 측이 임시정부와 접촉할 공식 책임자를 두고 독립된 청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제스는 이를 받아들여 우테청을 한국 문제 담당자로 임명하고, 청사 마련은 그의 권한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후 七星崗覓得蓮池 4호에 위치한 호텔 건물(行館)을 청사로 확보할 수 있었다.<sup>59)</sup> 청사는 국민정부의 차관을 받아 수리한 뒤 1945년 환국 직전까지 임시정부의 거점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전시라는 불안정 속에서도 임시정부의 재정 보조 확대, 청사 마련, 한국 문제 전담관 지정 등 실무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최소한 중국 내에서는 하나의 ‘공식적 존재’로 자리잡았다는 데에서 회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55)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7, 161~162쪽.

56) 「한국광복군 각 조문 의견에 관한 함광」, 1944년 11월 20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169쪽).

57) 「重慶物價繼續飛漲」, 『重慶商報』, 1942년 5월 29일.

58) 「김구 엄항섭이 이승만에 보낸 편지」, 1944년 9월 21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12(한국광복군Ⅲ)』, 72쪽).

59) 「韓國臨時政府에 廳舍賃借費 四百萬圓을 별도로 借款하여 주는데 대한 可否를 묻는 稟의서」, 1944년 11월 17일(崔鍾健 譯編, 『大韓民國臨時政府文書輯覽』, 117쪽).

하지만 무엇보다 제3차 회담에서 제기한 광복군의 자주권 회복과 행정적 지원 확대를 통해 임시정부가 전후 귀국과 국가 재건의 실질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임시정부 승인 요구와 광복군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임시정부가 합법 정부로 승인받을 때 광복군의 지휘권은 정당성을 갖게 되고, 반대로 광복군의 자주권 확보는 임시정부의 실체적 권위를 강화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김구는 승인 교섭의 한계를 군사적 실효성 강화로 돌파하고자 했다. 비록 3차회담에서도 외교적 승인이라는 결실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광복군 자주권 회복과 제도적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임시정부가 ‘사실상 승인’을 확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 3. 해방 후 김구-장제스 회담

가. 제4차 회담(1945년 9월): 반복적 접촉을 통한 관계 관리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이때 주석 김구는 시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이미 8월 5일 일본의 패망이 임박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시안으로 이동했다.<sup>60)</sup> 일본의 항복 직전 중국 각 주재지에 파견된 군사 단위를 시찰하고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함이었다.<sup>61)</sup> 8월 7일 김구는 제2지대 본부에서 OSS의 책임자 도노반과 광복군의 국내진공작전에 합의

60) 「韓國政府招待記者嚴大衛報告韓政府當前工作 韓光復軍一隊將嚮國內進軍」, 『大公報』, 1945년 9월 14일.

61) 「敦睦中韓邦交 報答深厚友誼 金九談話」, 『益世報』, 1945년 8월 12일.

했으며, 8일에는 杜曲(두취) 훈련장에서 광복군과 OSS 대원들의 마지막 훈련을 직접 참관하며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어 8월 10일에는 산시성(陝西省) 주석 주샤오저우의 초청으로 만찬자리에 참석했다.<sup>62)</sup> 이때 일본의 항복 소식을 알리는 전화가 걸려왔다. 일본은 이미 7월 26일 연합국의 최후통첩에 항복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8월 10일 스위스에 주재한 미·영·중 사절단에게 공식적으로 항복을 통보했다.<sup>63)</sup> 그날 저녁 8시 시안 전역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으나,<sup>64)</sup> 김구에게 일본의 항복은 오히려 수년간 준비해 온 참전 계획과 국내진공작전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 상황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하였다”고 표현했다.<sup>65)</sup>

하지만, 김구는 곧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지위 문제, 환국 준비, 그리고 중국 내 교민 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우선 8월 12일 장제스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 “충칭에 돌아가 즉시 만나 독립문제와 임시정부·광복군의 지위 등을 협의하자”라고 회답을 요청했다.<sup>66)</sup>

충칭으로 복귀한 후에는 임시의정원 회의에 참석해 총사직을 선언한 의원들을 수습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봉환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환국 준비 의지를 천명했다.<sup>67)</sup> 이어 8월 22일 우테청을 만나 “중국국민당과 한국독립당의 역사적 관계를 더욱 돈

62) 「韓國金主席來陝 光復軍李青天總司令偕行 昨晚到本報參觀極表訴忡」, 『益世報』, 1945년 8월 11일(만찬이 개최된 곳으로 알려진 주샤오저우공관은 당시 그의 이웃에 거주하던 胡抱의 손자 胡明의 증언으로 2025년 9월 21일 최종 확인하였다).

63) 「외적 항복의 교섭경과」, 『신한민보』, 1945년 8월 16일.

64) 「勝利之夕 市民歡忡若狂」, 『益世報』, 1945년 8월 11일.

65) 김구 저;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398~399쪽.

66) 「韓國主席金九 電蔣主席致賀」, 『大公報』, 1945년 8월 14일.

67) 「臨時議政院會議 第39回速記錄」, 1945년 8월 18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임시의정원Ⅲ)』, 국사편찬위원회, 2005, 150쪽).

독히 하고, 금후 적극적으로 원조해 줄 것”과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정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sup>68)</sup> 이 과정에서 김구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망록을 작성하여 장제스에게 전달했다. 그 핵심은 임시정부 요인과 동지들을 비행기편으로 조속히 귀국시켜 줄 것, 미국의 협조를 얻어 임시정부를 비공식 혁명과도정권으로라도 인정하여 환국을 가능케 할 것, 귀국 경비를 위한 3억 원 차관 제공 등 실질적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sup>69)</sup>

김구는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여 임시정부를 국민에게 봉환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귀국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정치·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한국 문제 담당자 우테청과 허귀광(何國光)을 통해 장제스와의 회담교섭을 요청했다.<sup>70)</sup> 하지만 회담은 쉽게 성사되지 않았다. 일본 패망 직후 미국과 연합국이 아직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성급히 임시정부와 협력할 경우 미국의 오해를 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우테청은 회담이 지연되는 배경을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대한정책을 살펴본 후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up>71)</sup>

결국 중국군사위원회는 9월 26일 오전 8시부터 한국문제토론회를 열어 한국과 관련한 전후 방침들을 논의하면서 이를 핑계로 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다. 이 회의는 행정원 등 주요 부처까지 참여한 대규모 회의로,<sup>72)</sup> 한국 문제 처리 방안과 대한정책 확정이 목적이었다. 따라

68)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5, 652~654쪽.

69) 「金九主席이 韓國 臨時政府와 僑民等에 대한 蔣總裁의 繼續的인 支援을 要請하는 公函」, 1945년 9월 26일(崔鍾健 譯編, 『大韓國臨時政府文書輯覽』, 163~165쪽).

70) 「金九가 吳鐵城에게」, 1945년 9월 12일(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5, 233~235쪽); 「金九가 何國光에게」, 1945년 9월 12일(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5, 246~238쪽).

71) 金俊燁,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119쪽.

72) 「한국문제토론회 참가 대표」, 1945년 9월 22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128쪽).

서 광복군의 요구사항이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었다.<sup>73)</sup>

같은 날 오후 4시, 장제스의 관저에서 제4차 회담이 열렸다.<sup>74)</sup> 우테청과 박찬익이 배석한 가운데 1년여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일본 패망 이후 달라진 정세 속에서 임시정부의 조속한 귀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sup>75)</sup> 김구는 귀국교통편 제공,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귀국 허용, 한국독립당과 국민당 간 밀약 체결, 차관 제공, 불법자를 제외한 교민 귀환 보장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sup>76)</sup> 이는 임시정부가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 생존과 활동 기반 확보를 위해 회담을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김구는 “형식과 명의를 불구하고”라는 단서를 달아 임시정부 명의를 귀국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항공편이 어렵다면 상하이까지 항공으로 이동한 후 선편으로 귀국하는 방안까지 제안하는 등 환국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다만 임시정부의 여당격인 한국독립당원의 우선 입국을 요청하는 등 김구 계열 인사가 먼저 귀국해 국가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임시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혁명과도정부 자격으로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sup>77)</sup> 미국 등 열강의 임시정부 승인 의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이나 정당의 정부가 아니라 ‘국가 기관’의 명의로 귀국함으로써 범통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려던 최선책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스는 끝내 승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73) 「한국문제토론회에 출석을 요청」, 1945년 9월(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137쪽).

74) 『蔣介石日記』, 1945년 9월 26일.

75) 『大公報』, 1945년 10월 20일.

76) 南坡朴贊翊傳記刊行委員會, 『南坡 朴贊翊 傳記』, 290쪽.

77) 「金九主席이 韓國 臨時政府와 僑民等에 대한 蔣總裁의 繼續의인 支援을 要請하는 公函」, 1945년 9월 26일(崔鍾健 譯編, 『大韓民國臨時政府文書輯覽』, 163~165쪽).

귀국 관련 실무적 사항만을 논의했다. 우선 귀국교통편 마련에 관해서는 중국 측 주관기관이 이미 미국과 교섭 중임을 알렸고, 행정원이 나서 戰時運輸管理局와 善後救濟總署를 통해 교통편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sup>78)</sup> 또한 직접 미군 항공운수를 재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귀국을 지원했다.<sup>79)</sup> 나아가 중국 내 한교 보호와 안전 귀국을 위해 임시정부 위원 20명을 상하이와 난징 등지에 파견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동 교통편 마련 또한 군정부 총무청을 통해 지원했다.<sup>80)</sup> 귀국 비용으로는 약 1억 원을 우선 지급하는 등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도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이 신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었다.<sup>81)</sup>

하지만, 끝내 맥아더 사령부는 임시정부 명의를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인 임시정부 요인들은 국무회의에서 격렬히 논쟁하며 일시적으로는 미군정 철수 후 귀국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혼란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지기로 했다.<sup>82)</sup> 형식상 정부 기구로서의 귀국은 불가능하지만, 임시정부 전원이 귀국하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정부로서의 귀국이나 다름없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sup>83)</sup>

결국 제4차 회담은 제3차 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시정부 승인 문제 해결이라는 회담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중국이 광복군의 독립 편제를 존중하는 한편, 임시정부의 귀국을 ‘정부의 귀국’으로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정치단

78)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청에 대한 답신」, 1945년 9월 24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130쪽).

79) 『蔣介石日記』, 1945년 9월 26일.

80)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교통편 제공 요청에 대한 답전」, 1945년 10월 22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131쪽).

81) 『蔣介石日記』, 1945년 10월 18일.

82) 趙擎韓, 『白岡回顧錄:己未獨立宣言臨時政府樹立六十周年紀念』, 韓國宗教協議會, 1979, 368쪽.

83) 南坡朴贊翊傳記刊行委員會, 『南坡 朴贊翊 傳記』, 291쪽.

체로서 대우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명목상의 승인 부재 속에서도 해방 후 여전히 임시정부의 실질적 자주성과 광복군의 독립적 위상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나. 제5차 회담(1945년 10월): 국제공동관리 논란 속의 원칙적 지지

해방 직후 김구는 시안에서 돌아와 임시의정원 회의에 참석해 조속한 환국 방침을 확정하고, 동시에 광복군 확군과 교민 보호에 주력했다. 그는 중국 내 한적 사병을 광복군으로 수용하는 한편, 중국 각지에 분산된 한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귀국을 알선하는 선무 공작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광복군 각 지대는 상하이·난징·칭다오(靑島) 등 주요 거점 12곳에 군사특파단을 파견했다.<sup>84)</sup> 이들은 한교 보호, 연합국과의 교섭, 일본군 내 한적 사병 접수 및 무장해제 협조 업무를 담당했다.<sup>85)</sup>

일본군 내의 한적 사병 수용과 잠편지대 편성은 광복군이 독자적 기반을 회복하고자 한 중요한 시도였다. 이는 임시정부가 장제스와의 회담에서 광복군 확군과 지위 정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한 배경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로 10월 말까지 난징·항저우·광둥 등지에서 잠편지대 편성이 완료되었다. 그 수는 난징 1만 명, 항저우 3천 명, 광둥 4천 명 규모로 집계되었다.<sup>86)</sup> 다만, 편입 인원의 성분이 복잡하여 내적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한교 귀환·재산 처리 등 업무가 급증하면서 별도의 교민 보호 기구가 필요성이 대두했다.

84) 「軍委會韓國光復軍第壹支隊第二區隊先遣部隊工作人員金珣載朴時竣朴世振等三員業已抵滬……」, 『新聞報』, 1945년 9월 13일.

8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6, 554~555쪽.

8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6, 568쪽.

김구는 이미 8월 우테청과의 면담에서 沿海 각지에 교민 보호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sup>87)</sup> 이러한 논의 끝에 10월 15일 駐華 韓僑宣撫團(이하 ‘선무단’)이 정식 발족했다. 선무단은 광복군 특파단을 기반으로 교민 조사·구호, 위생·풍기 지도, 조직 훈련 등 선무 사무를 전담했다.<sup>88)</sup> 이는 광복군이 단순한 군사 활동을 넘어 해방 직후 교민 보호와 환국 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중요한 사례였다.

1945년 10월 29일, 충칭 曾家岩 관저에서 김구와 장제스 간 다섯 번째 회담이 열렸다.<sup>89)</sup> 지금까지는 김구의 요청으로 회담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중국 측이 먼저 면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달랐다.<sup>90)</sup> 장제스가 이날 회담을 ‘會金九致別後’라고 표현했듯이<sup>91)</sup> 일본 패망 직후 한국을 앞두고 양측이 마지막 조율에 나선 자리였다.

김구는 먼저 중일전쟁 승리를 축하한 후 그간의 원조에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앞두고 해결이 필요한 다섯 가지 현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중국 각지의 韓僑를 日僑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괄 송환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는 장제스가 10월 17일 육군 총사령 허잉친에게 보낸 전보에서 일본군 내 한교를 일본 포로와 함께 집중·관리하고, 장래 일본 포로를 선박으로 귀환시킬 때 한

87) 「吳鐵城과 金九의 담화기록」, 1945년 8월 22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대중국 외교활동)』, 260쪽).

88) 李延燾, 「대한민국임시정부 주화대표단에 대하여-자료소개를 곁하여-」, 『경희사학』14, 817~819쪽.

89) 본문에서는 회담 날짜를 10월 16일로 하고 있으나, 박찬익, 민필호를 대표단으로 주재시켜 한교사무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이는 10월 29일의 회담일 것이다(金俊燁, 『石麟 閔弼鎬傳』, 120~121쪽).

90)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7, 457쪽(장준하는 ‘장제스의 시종실에서 면담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왔으며, 1945년 10월 29일, 오후 2시 중경시내 상청사 장제스의 관저에서 우테청, 김구, 박찬익이 배석 하에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기억하였다).

91) 『蔣介石日記』, 1945년 10월 29일.

교도 일괄 귀환시키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sup>92)</sup> 김구는 선량한 한교 보호와 귀국을 위해 이들을 일교와 분리하여 처리해 줄 것을 청원했다. 그리고 임시정부 귀국 후에도 박찬익·閔石麟을 대표단으로 중국에 주재시켜 교민 사무와 중국과의 연락을 담당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단은 곧 駐華代表團을 의미하며, 그 설치 문제는 이미 해방 직후부터 논의된 바 있었다.<sup>93)</sup>

장제스는 국민당과 한국독립당 간 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표단 설치에 동의했으며,<sup>94)</sup> 경비 등 필요한 지원과 주화대표단 승인을 약속했다.<sup>95)</sup> 그 결과 11월 1일 주화대표단이 정식으로 발족하여 박찬익을 단장으로, 이청천·민석린 등이 참여해 교민 보호와 중국 당국과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sup>96)</sup>

중국 입장에서 임시정부의 정식 승인은 미국·영국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유보를 결정한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주화대표단 승인과 지원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자체적으로 지원 결정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주화대표단이 신속히 설치된 것은 임시정부의 실질적 활동 기반을 보장해 준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김구는 또한 광복군의 자주적 지위를 유지하고, 중국군이나 연합군 체계에 흡수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장제스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정부가 광복군의 독립 편제를 존중하고 귀국 준비를 지원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김구의 입장을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2) 『民國日報』, 1945년 10월 19일.

93) 「韓國臨時政府要員의 還國과 重慶에 連絡員 駐在問題에 關한 協助를 要請하는 公函」, 1945년 9월 24일(崔鍾健 譯編, 『大韓民國臨時政府文書輯覽』, 162쪽).

94)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7, 276쪽.

95) 『蔣介石日記』, 1945년 11월 3일.

96)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7, 276쪽.

김구는 환국 직전까지 주화대표단의 업무를 직접 챙기며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했다. 그는 스투더(司徒德)와 우테청 등에게 서한을 보내 박찬익·이청천·민석린 등이 향후 한국 관련 사무를 담당할 것이니 자신과 같이 대우해 줄 것을 요청했다.<sup>97)</sup> 중국 당국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sup>98)</sup> 이로써 주화대표단은 李貞浩·朴英振·趙志暎·李成燁 등 네 명을 한교가 집중된 滬(상하이)·杭(항저우)·漢(한커우) 등지에 파견해 교민 보호와 귀국 지원을 담당하도록 했다. 중국은 대표단원에게 공식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활동을 보장해 주었다.<sup>99)</sup>

주화대표단 설치와 활동을 보장받은 후 김구는 본격적으로 환국 준비에 나섰고, 이를 위한 경비 지원을 요청했다. 장제스는 법폐 1억 5천만 원과 미화 2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즉시 5천만 원과 미화 20만 달러의 지급을 지시했다.<sup>100)</sup> 이는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환국 준비와 생존을 위한 실질적 원조였다. 장제스는 일본 패망 직후 “국민혁명으로 滿淸을 전복하고,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은 중국의 자유평등뿐 아니라 고려의 독립해방을 위한 분투이기도 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sup>101)</sup> 이러한 장제스의 태도에 는 한국을 일본 침략에 맞서 함께 싸운 동지로 인정하며, 전후 한중 협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sup>102)</sup>

97) 「駐華代表團의 활동에 지원과 가르침을 청하는 공함」, 1945년 11월 3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대중국 외교활동)』, 295쪽).

98) 「사진과 선물에 감사하며 작별을 고하는 편지」, 1945년 11월 7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대중국 외교활동)』, 298쪽).

99) 「中央執行委員會 秘書處에서 韓國駐華代表團에 특과원증명서 발급을 승인하는 箋函」, 1945년 11월 18일(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군무부)』, 국사편찬위원회, 2006, 25쪽).

100)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7, 458~459쪽.

101)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5, 652~654쪽.

102) 김정인, 「임정 주화대표단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24, 126쪽.

이처럼 제5차 회담은 임시정부 환국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교·한적 사병 처리, 주화대표단 설치, 귀국 경비 지원 등 실무적·제도적 기반을 최종 확정 짓는 자리였다. 이는 ‘승인’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제약과 달리 중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 현안들을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환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 다. 제6차 회담(1945년 11월): 송별과 전후 질서 구상 속의 한국 문제

1945년 11월 4일 오후 4시, 장제스는 부인 宋美齡(송메이링)과 함께 중앙당부 예당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을 위한 송별 차회를 주최했다. 행사에는 김구·김규식 등 임시정부의 지도부와 조소앙, 洪震 등 주요 인사 30여 명, 그리고 중국 측 평위상(馮玉祥), 옌시산(閻錫山), 우테청, 샤오리즈(邵力子), 왕충후이(王寵惠)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해 양국 관계의 긴밀함을 보여주었다.<sup>103)</sup>

장제스가 먼저 송사를 통해 “양국의 유구한 교의와 공동항일투쟁의 의의를 강조하고, 한국이 귀국 후 독립국가 건설에 매진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힌 뒤, “전후 동아시아 질서가 민족·인종을 초월한 협력 위에 구축되기”를 희망했다.<sup>104)</sup> 이어 김구 역시 장제스의 지원과 우의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sup>105)</sup>

차회 후 장제스는 부인과 함께 임시정부 요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오후 5시 반경에야 송별회를 모두 끝

103) 「蔣總裁暨夫人舉行茶會 歡送韓革命領袖歸國」, 『中央日報(重慶)』, 1945년 11월 5일.

104) 「蔣總裁暨夫人舉行茶會 歡送韓革命領袖歸國」, 『中央日報(重慶)』, 1945년 11월 5일.

105)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7, 269쪽.

이 났다. 그는 같은 날 일기에 “이 일은 아 국민혁명 중의 대사로 오늘 한국혁명당원이 능히 그 조국으로 돌아가는 날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부조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니 어찌 상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는가. 오직 능히 조속히 독립하기만을 기원한다”라고 기록하며 한국의 독립에 대한 기쁨과 기대를 나타냈다.<sup>106)</sup>

다음날인 11월 5일, 예정대로 임시정부 주석 김구 등 일행 29명이 九龍珊瑚堤兩 비행장에 모였다. 장제스는 우테청을 보내 환송하도록 했다. 중앙위원 장지(張繼), 샤오정, 쑨커(孫科), 천리푸(陳立夫), 샤오위린(邵毓麟) 등 중앙당정기관 요인들도 모두 비행장에 나와 임시정부 요인들을 배웅했다. 중앙비서처는 장쇼우셴을 파견해 임시정부 요인들을 상하이까지 동행하도록 했다. 특히 샤오위린은 이들과 함께 서울에 가 중국 주한대표를 맡을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의 불허로 성사되지 못했다.

김구는 비행장에 모인 이들과 작별하며 “중국 정부 및 인민이 다년간 한국독립운동에 보여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금후 정부 형식은 전 한민족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미 충분한 독립 자격을 갖추었으나 일정 기간 국제타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점은 맹방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현재 국내 상황을 관찰하면 단기간 내 연합정부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sup>107)</sup> 마침내 김구 주석 일행은 두 대의 비행기에 나눠 올라 상하이를 향해 출발했다. 상하이에 도착한 이들은 약 2주간 더 머문 뒤, 11월 23일에서야 미국 측이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다.

중국 정부는 광복군의 귀국 및 해산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자주적 귀국 절차를 존중하였다. 이는 광복군을 독립적 군사

106) 『蔣介石日記』, 1945年 11月 4日.

107) 「金九昨抵沪韩侨举行欢迎大会」, 『民国日报』, 1945년 11월 6일.

주체로 인정한 조치이자 김구가 일관되게 추구한 ‘자주적 독립운동 노선’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한편, 장제스는 11월 5일 김구 일행이 상하이로 출발한 뒤, 이들의 한국을 환송한 일을 “그 주의 가장 큰 위로”로 평가했다. 당시 그는 중국 동북 문제와 공산당과의 협상 등으로 깊은 고심에 빠져 있었으나,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한 임시정부가 독립을 성취하고 귀국해 국가 재건을 주도할 것이라는 사실은 큰 위안을 주었다.<sup>108)</sup> 그러나 1949년 6월 김구가 암살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으며, 임시정부 계열의 친중정권 수립 또한 실현되지 못했다.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 제1진이 한국할 때까지 중국은 끝내 임시정부를 정식 승인하지 않았으나, 주화대표단 등 실무 기구를 통해 사실상 대표부로 인정해왔다. 따라서 11월 4일의 송별회에서 드러난 환송과 지지는 승인 부재라는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는 상징적, 정치적 승인의 의미가 있었다. 김구와 장제스가 한국독립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천명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한 최종 회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후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을 중국과 친화적인 세력으로 포섭하려는 장제스의 전략적 계산도 함께 반영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 4. 맺음말

김구와 장제스의 여섯 차례 회담은 한국독립운동과 중국항일전쟁이 교차한 국제정세 속에서 형성된 외교적 협력의 궤적이었다. 이를 해방 전후로 나누어 보면, 각 시기의 회담은 상이한 목적과

108) 『蔣介石日記』, 1945年 11月 10日.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임시정부 승인과 광복군의 자주권 확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전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해방 전 제1차~제3차 회담은 한중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한국독립 문제를 국제정치의 의제로 부상시킨 시기였다. 그 가운데 제1차 회담(1933)은 윤봉길 의거 이후 김구가 중국 최고 지도자와 직접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제2차 회담(1943.7)은 전시연합체제 속에서 「카이로선언」에 한국독립 보장이 명문화되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어 제3차 회담(1944.9)에서는 임시정부의 공식 승인을 요구했지만, 장제스는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처럼 해방 전 회담들은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한국독립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해방 후 제4차~제6차 회담은 일본의 항복 이후 임시정부의 환국과 광복군의 지위 정리, 그리고 귀국 후 활동 기반 마련을 논의한 실무 중심이었다. 제4차 회담(1945.9)은 환국 문제를, 제5차 회담(1945.10)은 주화대표단 설치를, 제6차 회담(1945.11)은 환송과 향후 협력을 다루었다. 비록 정치적 승인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중국 국민정부의 지원을 통해 임시정부의 귀국 경로와 광복군의 자주적 조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결국 김구-장제스 회담은 해방 전에는 임시정부의 외교적 정통성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한 시도였고, 해방 후에는 귀국과 국가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단순한 한중협력의 사례를 넘어 전시 동맹체제 속에서 임시정부가 주체적 외교 역량을 발휘하며 국가 주권의 회복을 모색해 나간 일련의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이 회담들은 해방 이후 한중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고 광복군의 자주적 정체성을 유지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사료 및 신문

『蔣介石日記』

金九, "中韓合作之我見", 『(重慶)大公報』(1940년 7월 7일)

"金九昨抵滬韩侨举行欢迎大会", 『民国日报』(1945년 11월 6일)

"軍委會韓國光復軍第壹支隊第二區隊先遣部隊工作人員金珣載朴時竣朴世振等三員業已抵滬…….", 『新聞報』(1945년 9월 13일)

"敦睦中韓邦交 報答深厚友誼 金九談話", 『益世報』(1945년 8월 12일)

"勝利之夕 市民歡忭若狂", 『益世報』(1945년 8월 11일)

"외적 항복의 교섭경과", 『신한민보』(1945년 8월 16일)

"蔣總裁暨夫人舉行茶會 歡送韓革命領袖歸國", 『中央日報(重慶)』(1945년 11월 5일)

"戰後韓國獨立問題: 不能贊同國際共管"; 嚴大衛, "關於戰後韓國問題之一封公開信", 『大公報(重慶)』(1943년 2월 1일)

"韓國光復軍改隸臨時政府 戰時受我軍委會指揮", 『中央日報』(1944년 8월 29일)

"韓國金主席來陝 光復軍李青天總司令偕行 昨晚到本報參觀極表忭忭", 『益世報』(1945년 8월 11일)

"韓國政府招待記者嚴大衛報告韓政府當前工作 韓光復軍一隊將嚮國內進軍", 『大公報』(1945년 9월 14일)

"韓國主席金九 電蔣主席致賀", 『大公報』(1945년 8월 14일)

### 2. 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임시의정원Ⅲ)』,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군무부)』,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한국광복군Ⅲ)』,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8

-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외무부)』,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7
-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대중국 외교활동)』,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8
- 金正柱編, 『조선통치사료』10, 서울: 한국사료연구소, 1971
-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5, 서울: 대한매일신보사, 1999
-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白凡金九全集』7, 서울: 대한매일신보사, 1999
- 秋憲樹編, 『資料韓國獨立運動』1,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71
- 秋憲樹編, 『資料韓國獨立運動』2,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72

### 3. 논문

- 김용신, “장개석 국민정부의 미국 편승 전략과 한국의 독립 문제 1942-1945”, 『사회과학논집』 제49집 1호(2018): 44
- 김정인, “임정 중화대표단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24(1997): 126
- 배경한,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와 蔣介石”, 『역사학보』 224(2014): 390
- 배경한, “윤봉길의거 이후 蔣介石·국민정부의 한국독립운동지원과 ‘長期抗戰’”, 『역사학보』(2017): 344-345
- 양지선, “한국독립운동세력과 CC파·역행사의 공동 첩보활동”, 『동양학』 62(2016): 1
- 吳京平, “항전시기에 한국 임시정부의 승인에 대해 중국 국민 정부가 가졌던 태도에 관하여”, 『동방학지』 124(2004): 61-66
- 이재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공동관리안 반대운동(1942~1943)”,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48(2014)
- 조덕천, “중일전쟁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지원”, 『동양학』 63(2016)
-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71(2014)
- 官互進, “蔣介石參加開羅會議內幕”, 『湖北檔案』(2000): 40
- 張西虎, “論第二次世界大戰時期的中蘇關係”, 『社會科學家』(2005): 257
- 經盛鴻·經姍姍, “韓國志士金九等在南京的抗日復國活動”, 『日本侵華史研究』 3(2014)
- 陳永祥·何少偉·李文光, “開羅會議戰後米國遠東戰略視野中的中國戰場”, 『廣州社會主義學院學報』(2016): 92

#### 4. 단행본 및 회고록

-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서울: 돌베개, 1997
- 金俊燁, 『石麟 閔弼鎬傳』, 서울: 나남출판, 1995
- 南坡 朴贊翊 傳記 刊行委員會, 『南坡 朴贊翊 傳記』, 서울: 乙酉文化社, 1989
- 趙擎韓, 『白岡回顧錄: 己未獨立宣言臨時政府樹立六十周年紀念』, 서울: 韓國宗教協議會, 1979
- 김광재, 『한국독립운동의역사(한국광복군)』 52,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서울: 一潮閣, 1993
- 崔鍾健 譯編, 『大韓民國臨時政府文書輯覽』, 서울: 知人社
- 胡春惠, 辛勝夏역,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서울: 단대출판부
- 呂芳上編, 『蔣中正先生年譜長編(3)』, 台北: 國史館, 2013

〈Abstract〉

## A Study on the Kim Gu–Jiang Jieshi Talks Concerning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Autonomy of the Korean Liberation Army

Yang Ji-sun

This study examines the six meetings between Kim Ku, 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iang Jieshi, Chairman of the National Government of China, held between 1938 and 1945,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s diplomatic activities and the process of securing the autonomy of the Korean Liberation Army. Conducted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a government-in-exile during the Sino-Japanese and Pacific Wars, these meetings functioned as de facto summit diplomacy that shaped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cluding the recogn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 reorganization of the Liberation Army, and the repatriation of its members.

The study divides the meetings into two phases: the pre-liberation period (1938-1944) and the post-liberation period (September-November 1945). The earlier phase focused on diplomatic negotiation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independent status of the

Liberation Army, thereby elevating the Korean question to an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 The later phase addressed practical concerns such as repatriation, military reorgan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Representative Mission in China.

Despite delays in formal recognition, Kim Ku sought to demonstrate the Provisional Government's legitimacy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Liberation Army's autonomy, while Jiang Jieshi effectively acknowledged it through direct subordination, financial aid, and institutional support.

Ultimately, these meetings consolidated the diplomatic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reinforced the autonomous status of the Korean Liberation Army, marking a pivotal turning point in the diplomatic achievement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Keywords : Kim Ku, Jiang Jieshi,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Liberation Army, Cairo Declaration